

공 개



의안번호	제 18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6. 22. (제 12 차)	

(주)키움에스저축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6. 22.

1. 의결주문

(주)키움에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키움에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하여 (주)키움에스저축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2.4.7.) 심의필
- 제12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6.16.) 심의필

<별지>

(주)키움에스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 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

2. 조치사유

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등 위반

(1) 자체 보안성 심의 미수행

-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

- (주)키움에스저축은행은 ##.##.(시스템 가동시점) ~ ##.##.(검사종료일) 기간 중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하지 않았음

(2)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이행 위반

-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하여야 하고*, 공개용 웹서버를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해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7조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7조제1항제1호

*** 「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 (주)키움에스저축은행은 ##.##. ~ ##.##.(검사종료일) 기간 중 ◇◇◇◇◇시스템에 접속한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 금융보안원 침해사고 조사 결과 □□□□ □□ 관련 해킹공격에 이용된
▽▽ ▲▲개 중 ◆◆개가 ○○ ○○로 확인

##.##. 민원인의 제보로 해킹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 차단* 등의 대응조치를 즉각 수행하지 않았음

* 해킹 발생 가능성 인지 이후 즉각 ○○ ○○를 차단하였다면 ■일(##.##.~ ##.##.)의 유출기간 단축이 가능

##.##.(시스템 가동시점) ~ ##.##.(검사종료일) 기간 중 부주의로 인하여 웹서버에 대한 해킹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지 않도록 운영**하였으며, ##.##.에서야 새로운 웹 접근 제어수단(△△△△)을 설치하였음

* 웹 접근제어수단의 하나로 침입 탐지 및 차단 기능을 통합한 보안 솔루션

** 해킹공격을 확인하기 위한 ★★★★★ 시스템의 ◆◆◆◆◆◆◆◆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3) 해킹 등 방지대책 이행 위반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만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제1항제5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

○ (주)키움에스저축은행은 ##.##.(시스템 가동시점) ~ ##.##.* 기간 중 전산실 내 위치한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 (주)키움에스저축은행은 ##.##. 침입방지시스템에 차단 정책을 적용하여 인터넷 접속 차단

##.##. ~ ##.##.(검사종료일) 기간 중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시스템으로 일부 불필요한
서비스번호*를 통한 접속과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서비스번호를 통한 접속을 허용하였음

* 웹서버를 위한 웹서비스용 서비스번호(★★, □□□, ▲▲▲▲, ◆◆◆◆)를 ●●●.
◆◆서버에도 허용

관계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생략)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4. (생략)

②~④ (생략)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 마. (생략)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사. ~ 터. (생략)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
- 3.~6. (생략)
- ③~⑥ (생략)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
- 2.~4. (생략)
- ②~③ (생략)
-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생략)

제36조(자체 보안성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2. (생략)
- ②~④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략)
3. 제19조를 위반한 자
- 4.~12.(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4. (생략)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거. (생략)

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4,000만원

더.~녀. (생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I.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

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③ (생략)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⑤~⑧ (생략)

2.~5. (생략)

III. (생략)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검사결과와 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 마. (생략)

3. (생략)

③~⑧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전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④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⑥ (생략)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바.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생략)

②~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

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4. IT관련 법규 위반행위

1. 제재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한 행위

가. IT사고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유형 1 :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로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유형 2 : (접근매체 위변조 등에 의한 금전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위반) 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및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사고(단, 금융회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유형 3 :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지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 위반)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 재해복구목표시간을 초과하여 중단된 경우
- 유형 4 :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절 위반) 해킹 등으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나. IT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유형 5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IT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다. 기타

- 유형 6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1호 및 제4항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삭제·훼손한 경우

2. 제재기준

구 분	사고금액 위반건수 초과(중단)시간	제재양정	
		임직원	기관
유형 1	-	해임권고(면직)	기관경고 이상
유형 2	5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1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3	24시간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5시간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시간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4	1백만건 이상이고 전체고객수의 10%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10만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만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5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유형 6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주1) 'IT사고'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말함

주2) '핵심업무'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별표1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말함

주3) 동일한 위반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전자금융과	IT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75	02-3145-7340